

# 폐리보고서 발표 이후 북일 관계 개선 전망과 영향

이종국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 폐리보고서의 의미

**부**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그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미국 의회에 폐리보고서가 보고되었으며, 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게 된 배경, 1998년 12월 이후 전개된 상황,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북 접근의 제시, 앞으로의 대북 정책 건의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한일 양국과 협조하고 대북 포괄적인 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지시키면서 제재를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동결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협력해서 한반도 냉전 종결을 달성한다는 3단계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보

고서는 1994년 '북미합의' 이후 새로운 대북 한 정책이며 또한 군사적인 억지로부터 한일 양국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대화를 행하면서, 동북아 안전 보장을 유지하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있다.

폐리보고서는 북미간뿐만 아니라 북일간 국교 정상화 교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로 북일간 관계 정상화 교섭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일간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화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폐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성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은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 문제'라는 종래의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다. 둘째, 북미평화협정 문제, 주한 미군 유지 강조, 최해국 대우 공여 문제, 테러 지원국으로부터 해제 문제 등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계속해서 체제 존속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핵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이 제재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고 하여 바로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북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정치 외교적 측면

페리보고서가 북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과 관계 정상화가 시작되면 이어서 북일간에 교섭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경직되었던 동북아시아 외교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북한이 공식적으로 외교 무대에 등장하면서 동북 아시아는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할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교섭의 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일본은 북일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비공식적으로 북한과 관계 정상화에 노력할 것이다. 정부간 교섭보다는 빠르게 비정부적인 차원에서 활발한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페리보고서가 발표되자 오부치 게이조 수상은 북미회담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진행이 한층 진전되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합의로 미사일 발사 동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미사일 발사 동결이 어느 정도 확실한지 지켜보면서 일본의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도 “방향성 자체는 환영하면서 합의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지난 8월 10일 북한은 “일본이 과거 청산을 통하여 선린 관계 수립 방향으로 나온다면 그것에 응할 것이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에 대해 일본 정부도 “새로운 측면이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염려와 북일간 문제에서 건설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선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면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 접근을 통하여 한미일협조체제를 공고화하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대포동미사일 재발사 등 북한이 주변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을 삼가한다면,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관계 정상화 노력을 종합적으로 행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일본 국내에서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미국처럼 어느 정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강경파와 외교파 또는 급진론과 단계론으로 나뉘어져 전개되고 있다.<sup>1)</sup> 폐리보고서 이후 일본 정부와 여론은 대체로 대북 신중론의 입장을 취하면서 교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이 대일 3원칙을 정부 성명을 통해 발표하자 “주의깊게 대응하고 진의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5월 폐리 방북 때 북한은 오부치 수상의 메세지를 거부하면서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고, 오부치 수상이 강조하는 ‘대화와 억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민당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 前 郵政 장관이 방북했을 때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후 일본 외무성도 북경과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했으나 북한은 똑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아카시(明石康) 前 유엔 사무차장이 방북했을 때, 북한 당국자가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하자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침을 취하였다.<sup>2)</sup>

## 경제적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 북일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 제재 조치로 침체되었던 북일 관계는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 이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5년 3월 일본의 연립여당대표단의 방북으로 양국 관계는 정상화 교섭을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일본은 식량 지원과 간접적인 금융 지원 모색 등을 통하여 북한과 경제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일본의 경제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대북 진출 사업은 정부간 차원을 훨씬 넘어 보다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95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일본 기업들은 대북 투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북일 국교 정상화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sup>3)</sup> 최근 양국 경제 관계를 살펴보면, 1998년 상반기 북한의 대일 무역 총액은 2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1.8%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일 수출은 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교하면 14.6% 줄었으며, 수입은 1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약

1) 김유남(1996), “북미·북일 관계의 현황과 남북한 관계: ‘아드맨아웃’(Odd Man Out) 게임을 생각하며”, 「統一研究論叢」, 第5卷 1号, p. 37.

2) 「毎日新聞」(1999. 7.3).

3) 김영춘(1996), “수교 이후 일본의 대북한 경제 협력 전망”, 「統一研究論叢」, 第5卷 1号.

간 늘었다. 그러나 수입보다는 수출의 증가 폭이 커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 같은 기간의 0.4억 달러에서 0.5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8년도 북한의 대일 무역 규모는 전년도의 4.9억 달러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sup>4)</sup>

폐리보고서 이후 북미 관계는 민간 부문의 무역과 투자, 금융 거래가 해제되고 항공 기와 선박 왕래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북일 관계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다.<sup>5)</sup> 그렇다면 북일 관계 개선이 미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도 모른다. 미국의 전략이 폐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억지와 미국의 제재 완화, 중기적으로 핵·미사일 개발 중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종결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북한의 자세를 보다 더 유연하게 하면서 그 교섭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폐리보고서는 1992년 11월 '이은혜 문제'로 북일 국교 정상화가 결렬된 이후의 북일 관계 외교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일본은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외교 무대에 등

장하여 한반도에서 보다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다. 먼저 초당파 국회의원들을 구성해 북일 관계 개선을 무라야마 前 수상을 중심으로 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방북시 핵의혹 문제, 대포동미사일 재발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전달하고, 납치 의혹에 대해서는 '행방 불명자'로 재조사를 타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방북 조건으로 식량 지원이나 경제 원조 등을 제시할 것이다.

### 군사적 측면

군사적 측면에서 폐리보고서 이후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가 유보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일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은 보이고 있다. 1999년판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새로운 위협으로서 북한의 대포동 발사와 공작선 사건들을 그 실례로 들고 있으며, 전역미사일방위(TMD)나 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의 성립 의의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재발사가 염려되는 대

4)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21B21/214.htm>; 통일부, 「북한의 대외 정책」.

5) 미국 정부가 9월 17일 발표한 제재 완화 내용은 ① 북한산 물품·원재료 수입, ② 미국 기업의 소비재나 금융 서비스 등의 수출 및 재수출, ③ 농업·광업·석유·임업·운수업·관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 ④ 미국 주민으로부터 북한 주민에게 송금, ⑤ 북한에 미국 상선·항공기에 의한 화물 수송, ⑥ 북한·미국간 상업 항공편 운항 등이다.

포동2호의 성능을 사정거리 3,500~6,000 km로 분석하면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로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사정거리가 약 1,300 km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이 그 사정권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백서」는 미사일 본체나 관련 기술이 북한으로부터 이전·확산될 위험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sup>6)</sup> 일본은 작년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수집 능력 강화로 화상 위성 활용 조사 등 구체적인 방책을 취하면서, 동시에 탄도미사일방위(BMD) 시스템의 기술 연구도 추진하게 되었다.<sup>7)</sup> 일본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유사 법제의 정비를 서두르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 비상 사태시를 대비 계릴라 소탕 도상 훈련도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일본 외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해 '인간의 안전보장'을 제창하고,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지

역에 대해서는 '유라시아 외교' 구상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는 북일 관계의 봉착으로 일본 외교의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교섭을 위해 정책상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북한과 핵·미사일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사회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재일조총련 문제를 보면, 북한은 최근 조총련 개혁안을 통하여 조총련 가운데서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조직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김정일은 조직 방위를 위하여 재일동포를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정일은 국교 정상화가 실현되면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라는 자금이 획득되기 때문에 북일 국교 정상화는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총련은 그러한 절차를 만들기 위하여 북한이 현재 행하는 일본 비판을 맹종하지 말고 조정역을 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sup>8)</sup> 북일 관계가 정

6) 「朝日新聞」(1999. 10.28).

7) 「毎日新聞」(1998. 9.2)

상화되면 그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서 조총련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할 것이다.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 이후 북한의 대외 정책은 확실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북미 관계 개선, 4者회담, 남북 관계, 국제 기구로부터의 식량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남지만, 과거와 같이 국제 사회를 적대 시하는 정책은 취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체제의 생존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체제가 변화하는 속도는 국제 사회가 바라는 정도는 아닐 것이다. 북한은 체제 유지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나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기능 불능 상태의 국가가 될 것이다.

폐리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일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일본은 북미 관계의 전전파한·미·일 정책 조정을 거치면서, 비공식적인 접촉을 증대시키고 서서히 공식적인 접촉

을 확대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시켜나갈 것이다.

### 북일 정상화의 향방

앞으로 북미고위급회담이 성사되고 북일 간에 어느 정도 대화의 분위기가 성사된다면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새로운 의제로 등장할 것이다. 북미 관계가 11월 이후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서로의 입장을 명문화하면, 그 후에는 북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일간은 핵문제·배상청구권 문제·이은혜 문제 가운데서 특히 배상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핵문제는 이미 북미 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교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배상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정상화 교섭을 시작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교섭은 두 단계로 진행할 것이다. 첫째는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식량 원조와 경협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섭이 진행되면 배상이냐 혹은 경제 협력이냐라는 문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현금만으로서가 아니라

8) 「毎日新聞」(1999. 8.4).

기초 설비에 관한 물자·용역 등을 통하여 북한 경제 재생에 참가할 것이다. 물론 교섭에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본 정부는 재일조총련을 통하여 합작 사업도 실시할 것이다. 북한도 일본과 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무라야마 前 수상의 방문으로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 국교 정상화

먼저 국교 정상화 문제부터 살펴보면, 북한과 일본은 그동안 8차에 이르는 수교회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사실들의 입장들을 정리하면서 논의를 재개할 것이다. 북한과 일본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하여 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그 쟁점은 수교 원칙 면에 있어서 타결과 수교를 둘러싸고 양국이 입장을 달리하였다. 둘째, 핵사찰 문제가 수교 교섭의 사항이 되느냐와 관련한 문제이다. 셋째,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조약들의 무효성 문제와 그것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식민지 보상 문제가 국교 정상화의 전제 조건이 되어왔다. 마지막으로 '이은혜 문제'를 둘러싼 납치 의혹 문제 등이 양국이 논의한 쟁점 사항들이다.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정상화 교섭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인가? 북한은 정통성 차원에서 지난 수교 협상 때와 같이 그들의 입장을 고집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북일 국교 정상화를 기정 사실화하면서 3 개 원칙을 일본에게 제시하였다. 북한의 성명 내용은 첫째,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살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 국민에게 범한 과거의 죄에 대해 성실한 사죄와 철저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일본이 어디까지나 힘의 대결로 나온다면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선택한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sup>9)</sup>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북일간의 쟁점 사항은 지난 회담 때와는 달리 협상 가능한 여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국이 타결 짓기 어려운 사안은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북미 관계의 진전을 지켜보면서 정당 차원의 방북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 국내 사정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 1998년 대포동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국내 정치의 분위기는 북한

9) 「朝日新聞」(1999. 8.10).

의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식량 원조나 다국간 지원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페리보고서 이후 한·미·일 3국은 대북 정책의 조정을 통하여 한반도냉전체제의 종결과 동북아시아 안전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현 정부는 햅별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 개선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 상황 하에 앞으로 있을 북일 관계 정상화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조건하에서 전개될 것이다.

### 배상금과 경협

배상금 및 경협 문제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 국교 정상화 교섭과 함께 경제 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이다. 먼저 배상금 문제부터 보면, 지난 정상화 교섭에서 제기되었던 배상·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준하면서 나머지는 경제 협력이라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10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일본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선례에 따라 40억 달러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sup>10)</sup> 이렇게 볼 때 배상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협의 될 사항은 아니지만, 북한의 국내 사정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의외의 결과를 가져 와 60억 달러 정도로 타협될 가능성성이 높다.

이렇게 하여 북일간 수교가 진행된다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북한 지역에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먼저 일본은 지금까지 예비 조사에 기초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에 진출할 것이다. 기간 산업 확충을 진행시키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을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다. 이 부분은 역시 한국과 미국보다는 일본이 배상금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에 재일조총련계 기업에 의존적이던 구조를 수정하면서 일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북한 지역에서 일본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이 진행될 것이다.<sup>11)</sup>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재일조총련 기업들에게 저리의 융자를 실시하면서 대북 투자를 촉진시켜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동해연안을 중점적으로 성장시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 지역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전략을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

10) 김영춘, 앞의 글, p. 106.

11) 상세한 논의는 김영춘, 위의 글, pp. 113~116.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의 구상을 통하여 외자를 유치해서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시아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시키려 하였으나, 노후화된 인프라 설비와 법제도의 미정비·핵의혹 문제 등으로 실패에 이르자, 1990년 전반부터 경제 정책 수정과 함께 법 제정을 통하여 투자 환경을 정비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기구를 통하여 혹은 자국내 프로젝트를 통하여 철저한 투자 조사를 실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기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다국간 경제 협력을 촉진시키는 데 북한 문제가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장기적인 구상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 한반도에 미칠 영향

북미·북일 국교 정상화가 진전되면 먼저 남북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한은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서로가 대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 주변 상황을(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상황) 면밀히 분석하면서, 동시에 우리 정부의 대원칙인 정경 분리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대북 정책을 활성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북일 국교 정상화로 남북 경제 협력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일 국교 정상화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더욱 확실해질 수 있도록 다국간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일 3국간 정책 조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 한일각료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3국이 협조하여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전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그리고 한일 양국은 종래의 한국·북한·미국·중국 '4者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을 염두에 두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전 보장을 진행시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것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続